

요 약

- ▶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선진형의 상생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재 건설산업의 상생구조, 즉 건설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「경쟁과 협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」를 실시
 - 지난 수년간 국내 대중소 건설업체 간 상생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함. 이를 위해 종합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경쟁과 협력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인식을 조사함.

- ▶ 건설업체 수 급증은 건설업의 양극화를 초래, 이로 인한 대중소 건설업체 간 수주 물량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물량배분정책 확대 필요 제기
 - 대중소 건설업체 간 수주 물량 양극화를 묻는 질문에서 중견과 중소형 건설업체로 갈수록 이와 관련한 심각성(약 63%)에 대한 인식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.
 - 중소 건설업체 보호정책과 관련해 물량배분정책 확대를 묻는 질문에서도 중견 건설업체(77.7%)와 중소 건설업체(82.7%)측의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됨. 그러나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난립 등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최근 들어 비판이 큼.

- ▶ 상생발전을 위한 공정/투명한 입찰 경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을 인식. 그러나, 아직까지 국내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보호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.
 - 건설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경쟁 시스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건설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함.
 - 그러나, 지역제한입찰제도 확대와 등급제한입찰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중소기업체로 갈수록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 최근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중소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물량배분정책 개선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임.

- ▶ 현행 공동도급제도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체의 수주 물량 제고를 통하여 대중소업체의 양극화 해소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.
 - 공동도급제도로 인한 업체간 협력관계 왜곡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대형업체 56.7%, 중견업체 50%, 중소기업체 50%가 왜곡 심화 라고 응답을 해 건설업계 과반수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중소기업체 71.2%가 필요하다고 답해 물량배분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. 그러나, 장기적으로 협력을 통한 기능과 역할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.